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의안 번호	24747
----------	-------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지성호 · 박대수 · 박정하
김상훈 · 장동혁 · 윤재옥
배준영 · 권명호 · 윤한홍
홍문표 · 박덕흠 · 김예지
윤두현 · 김희곤 · 최연숙
권성동 · 한무경 · 홍석준
조경태 · 강대식 · 박성중
유상범 · 태영호 · 권영세
윤상현 · 조은희 · 배현진
허은아 · 이종배 · 이태규
서범수 · 서정숙 · 김승수
이 용 의원(34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 억류중인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지위협약(1951)」, 「고문방지협약(1984)」, 「사회권규약(1966)」 등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구금 및 송환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의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안이유

중국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소환하고 있음.

한편, 최근 북한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귀국하지 못하고 국외에 체류하던 노동자·유학생·외교관 등의 귀국을 승인하며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음. 이에 따라 2,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중국 내 억류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있음.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공개·비공개 처형을 포함해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노동 착취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됨.

중국 내 억류중인 북한이탈주민 2,600여 명의 북송은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이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를 촉구하고자 함.